

바이든 행정부 코로나19 대응 정책(American Rescue Plan Act)의 성립 과정과 배경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Risk of COVID-19:
American Rescue Plan Act

김태근 (미국 아델파이대학교 교수)
Taekeun Kim (Adelphi University)

지난 3월 미 연방상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1호 입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을 통과시켰다. 작년 4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조 및 경제보장법(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과 12월에 통과된 긴급 지원안에 이어 3차 코로나19 구제법안인 ARP Act는 1조 9,000억 달러 (2,20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으로 현금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확대 정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가 통과되기까지 어떠한 정치적 논의 과정이 있었으며 주요 쟁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법안의 핵심 축인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을 알아본다. 아울러 새로운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과 보폭을 예단해 본다.

1. 들어가며

2021년 3월 6일 미 연방 상원은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의 1호 입법이자 지난 10여 개월 동안 미 정치권의 핵심 의제였던 3차 코로나19 구제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구조 계획법(이하 ARP Act)」(ARP Act: American Rescue Plan Act)라 명명된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코로나19 보조구조 및 경제보장법(이하 CARES Act)」(CARES Act: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의 후속 패키지 법안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출을 포함하고 있다(Cochrane, 2021). ARP Act의 투입 예산은 1조 9000억 달러

(약 2200조 원)로 CARES Act의 2조 2000억 달러(약 2600조 원)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만약 이 법안이 3월 중 시행될 경우 미 연방정부는 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약 5조 달러(약 5800조 원)의 재원을 일반 세출 외에 추가로 지출하는 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¹⁾

ARP Act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바이든 행정부와 새로운 의회 권력의 역학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ARP Act가 내포한 이러한 정치적 함의는 향후 미국 사회 정책의 보폭과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ARP Act의 성립 배경과 법안의 수립 과정을 짚어 보고, 어떠한 쟁점들이 논의되었는지 내막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ARP Act의 핵심인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사회 정책을 예단해 본다.

ARP Act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두 단계의 절차(하원의 상원안 통과와 대통령의 인준)가 더 남아 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가 하원에서의 상원 수정안 채택을 전적으로 지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Williams, 2021). 따라서 이 글은 3월 6일 통과된 상원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2. ARP Act의 성립 배경

이미 언론을 통해 ARP Act의 단편적 내용들, 특히 현금 지원 정책(stimulus check)이 집중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정작 ARP Act의 등장 배경을 통시적으로 다루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이 장에서는 먼저 어떠한 거시적 맥락에서 ARP Act가 탄생하였는지 살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시행된 CARES Act는 당시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주도하고 하원 다수당이던 민주당의 전폭적 지지하에 일사천리로 통과된 초당적 법안이었다. CARES Act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여전히 사회경

1)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지난해 12월 공화·민주 간 합의에 따라 9000억 달러(약 1044조 원) 규모의 2차 구제 법안을 통해 긴급 자금을 가계 및 시장에 지원하였다.

제적 불안정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2차 구제 법안, 즉 CARES Act²⁾에 대한 사회 저변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민주당 주도하에 「건강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 긴급 대책 법안(이하, HEROES Act)³⁾(HEROES Act: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 Act)」이 5월 말 하원을 통과한다.²⁾

하지만 당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였던 미치 매킨(Mitch McConnell)은 3조 달러(약 3480조 원)를 넘어서는 HEROES Act의 예산이 연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것이란 이유로 상원에서의 법안 상정을 거부하고 공화·민주 양당 간의 협상은 교착에 빠진다. 이후 7월을 거치며 미국 정치권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되는데, 소극적인 공화당을 제치고 협상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이었다. 11월 선거 직전까지 이어진 협상에서 민주당과 백악관은 각각 2조 2000억 달러와 1조 8000억 달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간극을 좁혔지만,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 조율에 실패하여 최종 협상은 결렬된다(김태근, 2020b).

이런 가운데 공화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현금 지원(stimulus check)의 중요성을 강조한 트럼프는 1인당 2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오히려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다(Mastrangelo, 2020). 하지만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주장은 공화당 의회 지도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백악관의 법안 거부 위협에도 불구하고 공화·민주 양당은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포함하는 9000억 달러(약 1040조 원)의 2차 구제안을 12월에 도출한다(Lobosco & Luhby, 2020).

일단 공화당 입장에서는 현금 지원액을 1인당 2000달러에서 600달러로 대폭 축소하였다는 점에서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상원 소수당이라는 현실적 한계 속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협상을 일종의 ‘중간 과정’으로 삼고, 2021년 1월로 예정된 조지아주(Georgia) 상원 결선투표에 현금 지원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전략으로 대응한다(Goldiner, 2020).³⁾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의 이러한 전략은 성공을 거두는데, 조지아주 결선

2) HEROES Act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태근(2020a)에 기술되어 있다.

3) 통상 상하원 의원 선거는 다양한 지역 현안이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이번 1월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민주당 측이 구사한 전략은 단순 명확했다. “2000달러의 현금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면 민주당 후보를 뽑아 주십시오!”(Jarvis, 2020)

투표에서 두 석을 다 석권하는 파란을 일으키며 백악관과 양원을 모두 탈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민주당과 바이든 캠프에서 주장하던 대규모의 구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Colby, 2021).

3. 바이든 행정부의 3차 구제안

상원마저 민주당이 장악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예상보다 안정적인 정치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취임과 동시에 공식적인 1호 입법안으로 1조 9000억 달러(약 22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구제안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ARP Act이다. 이미 선거 기간에 바이든 캠페인은 1인당 2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구제안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해 왔는데,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경험한 교훈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Luhby, 2021). 취임 초 금융위기 문제 수습을 위해 나선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과 일부 보수주의자들의 비판을 인식하여 지나치게 신중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구제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조치는 결국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더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의식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구제안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때마다 유독 ‘크고 빠르게(go big and fast)’를 강조하였다.

한편 여론과 전문가 그룹 그리고 시장에서조차 바이든의 구제안을 지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대통령 취임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대규모 구제안을 지지하였다(Zhao, 2021). 취임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79%가 추가적 현금 지원(stimulus check)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Slisco, 2021). 이에 더하여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전 연준(Fed: Federal Reserve Bank) 의장 재닛 옐런(Janet Yellen)은 경제 정상화를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 개입이 ‘절대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Shepardson, 2021). 물론 일부 전문가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고, 바이든 캠페인의 경제 자문이었던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는 추가적인 현금 지원이 경기 과열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금 지원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지만(Horti, 2020),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을 포함한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소극적인 행보가 현 상황에서 경제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emon, 2021). 또한 미국 내 주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비즈니스 리더들도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구제안을 촉구하고 나섰다(Locke, 2021).

공화당으로서는 ‘공화당을 제외한 모두(all but GOP)’가 구제안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반대만을 고집할 수 없었고, 결국 1월 말 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된다. 미치 매킨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12월에 2차 구제안을 채택하며 “미국은 더이상의 구제 법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지 한 달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공화당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 실패 시 민주당 단독으로 구제안을 통과시키려는 준비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새롭게 상원 예산위원장을 맡은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있었다. 기존 바이든 안보다 더 강력한 구제 법안을 주창해 왔던 샌더스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원에서의 ‘예산조정권(budget reconciliation)’⁴⁾ 발동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한다(Ollstein, Cassella, & Emmam, 2021).

4. 백악관·공화당 협상과 예산조정권 발동

협상을 위한 양보는 바이든이 먼저 제시하였다. 민주당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며 유세 기간 중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000달러의 현금 지원액을 1400달러로 축소한 것이다. 이유는 2차 구제안을 통해 이미 지급된 600달러를 계산에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바이든은 공약을 지켰다는 명분을 얻으며 동시에 공화당에는 협상의 제스처를 보낸 것이다. 공화당에서는 당내 중도 진영의 대표 주자인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를 포함하여 10명의 중도 성향 의원들이 별도 입법안을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직접 백악관을 방문하여 바이든과 담판을 벌였다. 사실 공화당 안의 세부적 내용이 공개되기도 전에 총예산 규모가 밝혀진 순간 이미 백악관 회동의 결렬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공화당 안의 총예산은 원래 백악관 안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180억 달러(약 716조 원)였기 때문이다(Luhby & Lobosco, 2021). 당연히

4) 하원과 달리 필리버스터가 허용된 상원의 경우 법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6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에는 시간제한이 없으며 60명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산조정권이 발동된 경우 필리버스터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51명의 단순 과반으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Barrett, Lauren, & LeBlanc, 2021). 상원 의석수가 50-50으로 양분된 가운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조정권으로 상정된 법안은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협상은 실패했고, 이제 바이든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예산조정권밖에 없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유세와 취임 연설을 통해 ‘협치’를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행정부의 1호 법안을 예산조정권을 통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더군다나 구제안의 효과에 대한 의문 그리고 과도한 정부 지출이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렇다고 공화당과의 협상에 매달릴 경우 앞서 언급한 2009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하였다. 이런 와중에 초당적으로 신뢰받는 의회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정례 보고서를 통해 12월에 통과된 2차 구제안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1.5% 증가시킬 것이라는 고무적 예측을 발표한다. 구제안의 효과성을 검증해 주는 대목이었다. 또한 이 무렵 연준(Fed)에서는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대규모 구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의회에 전달한다. 특히 경기 과열 및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연준은 “구제안 부재로 인한 경기 침체가 구제안으로 인한 경기 과열보다 더 위험하다(Undershooting is a bigger risk than overshooting)”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회예산국의 보고서와 연준의 메시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구제안에 정책적 정당성을 더해 주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바이든과 민주당은 예산조정권 발동에 동의했다. 그렇게 공은 의회로 넘어갔다.

5. 선별주의 논쟁과 상원 통과

예산조정권은 상원 위원회 회부, 법률 조건 적시, 상원 과반 투표 통과 등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50-50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단 한 표의 이탈만 있어도 예산조정권 발동에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실제로 민주당 상원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바로 웨스트버지니아(West Virginia)의 상원의원 조 만친(Joe Manchin)이 현금 지원 대상의 축소를 요구하고 나선다.⁵⁾ 이제 현금 지원 정책에서 선별주의 논쟁이 핵심 의제로 부상한 것이다. “어느 소득 수준까지 현금을 지원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미 1차 구제안 때부터 주요 쟁점 중 하나였는데, 3차 구제안 통과를 목전에 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다

5) 만친은 현금 지원의 축소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실업급여 확대안에 대해서도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민주당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잠재적 균열을 드러내는 것이었다(Pengelly, 2021).

시 한번 최대 변수로 등장한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의하면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서 현금 지원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Long, 2021), 이는 만친이 요구한 선별성(targeting) 강화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친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안 통과 시 수혜 대상의 소득 수준을 재조정한다”는 단서를 달고 예산조정권을 통과시킨다.

당장 비난이 터져 나온 것은 하원의 민주당 진보그룹에서였다. 바이든 원안도 부족하다며 지원의 규모와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던 이들에게 수혜 기준의 강화는 법안의 심각한 퇴보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정치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하원의 민주당은 상원 안을 받아들여 구제안을 통과시키고 다시 상원으로 회부한다.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와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원 최종 투표에 앞서 법안 수정을 위한 라마투표(vote-a-rama)⁶⁾가 이어지고 20여 시간의 토론을 거쳐 ARP Act는 정식으로 상원을 통과한다. 결과는 예상대로 완벽한 당파성을 띠며 찬성 50, 반대 49였다(한 명의 공화당 의원이 개인 사정으로 투표에 불참하였다). 법안의 규모가 미 역사상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법안 전체의 길이는 700페이지에 달했다. 그만큼 광범위한 구제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 글에서는 ARP Act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현금 지원 정책의 골자를 살펴본다.

6. 현금 지원 정책의 내용

먼저 현금 지원 정책의 경우 성인과 부양가족 모두에게 1인당 1400달러를 지급하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혜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부부는 15만 달러가 정해졌다. 완전 수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소득분에 따라 지원액이 삭감되는 구조인데, 이는 1, 2차 현금 지원 정책과 동일하다. 이전 CARES Act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우선 CARES Act의 경우 1인당 지급액이 1200달러였는데, 이를 200달러 인상하여 1400달러로 하였다. 또한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도 CARES Act 때는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이던 것을 1400달러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CARES Act에서는 제외되었던 17세 이상의 부양가족

6) 상원의 일반 법률 통과 과정에서는 일련의 수정안들이 일괄적인 가부투표(a series of procedural maneuvers)로 결정되지만, 예산조정권이 발동된 경우 '모든' 개별 수정안들에 대해 개별 가부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를 라마투표라 한다.

(대학생 등)도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다. 반면 초과 소득 대상에 대한 지원액의 삭감률(phase-out rate)을 대폭 증가시켜 전체적인 수혜 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즉 1차 현금 지원 정책에서는 1인 가구는 연소득 9만 9000달러, 부부는 20만 달러까지는 지원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1인 가구는 연소득 8만 달러, 부부는 16만 달러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Rahman, 2021).

한마디로 ARP Act는 CARES Act와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지원액을 증액시키는 대신 선별성을 강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선별성을 강화하였다고는 하지만 미국인 및 합법적 거주자의 85% 정도가 정책의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ARP Act가 3월에 시행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4인 가구(부부+2명의 자녀)의 경우 1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1만 1400달러(약 1320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는 셈이 된다.⁷⁾ 여기에 추가하여 실업을 당한 경우 별도의 실업급여(월 2000~4000달러)를 받게 된다.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폭넓은 대상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현재의 고용 사정과 경기 회복의 속도를 고려할 때 현금 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였다(Tankersley & Smialek, 2021).

7. 나가며

이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구제안인 ARP Act의 성립 과정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ARP Act의 상원 통과는 크게 세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바이든 백악관 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1호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향후 국정 운영 및 주요 공약 입법화에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후 바이든의 주요 사회 정책 공약 중 최우선 순위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APR Act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연동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척 슈머(Chuck Schumer)와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등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의회의 다음 의제로 공식화하는 형국이다. 둘째, 미국민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직접적 개입에 부정적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코로

7) CARES Act: 3400달러+2구제안: 2400달러+ARP Act: 5600달러=1만 1400달러.

나19 사태를 경험하며 연방정부의 개입과 적극적 사회 정책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분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공화당 내의 기류 변화도 야기하였는데, 단적인 예로 밋 롬니 상원의원은 구제안 협상이 한창이던 2월 중순 아동 1인당 매년 4200달러의 아동수당을 제공하는 (기존 공화당 입장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Higgins, 2021). 셋째, 50-50으로 양분된 상원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잠재적 위협은 민주당 내의 노선 갈등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ARP Act 입법 과정에서는 민주당 내 진보그룹의 양보가 법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정책들, 특히 진보 진영의 숙원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안의 경우 민주당 내 진보 진영과 중도·보수 진영의 견해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정책 입안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점은 일련의 코로나19 구제안들로 말미암아 진보적 사회 정책의 정치적 입지가 좀 더 공고해졌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분된 의회 의석(특히 법안 통과에 최종 관문인 상원)과 강화된 당파성을 고려할 때 이후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그리고 이미 예산조정권을 한 번 사용함으로써 이번 회계연도 내에 예산조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Carney & Brufke, 2021). 정책 입법안들의 상원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협력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사회 정책을 어떠한 과정으로 채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문헌

- 김태근. (2020a). 미 연방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정책에 대한 고찰: 현금 지원 정책(Economic Impact Payment)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13, 21-35.
- 김태근. (2020b). 미국 11월 선거와 차기 행정부의 사회정책 방향 및 전망. 국제사회보장리뷰, Vol. 15, 103-112.
- Barrett, T., Lauren, F., & LeBlanc, P. (2021). *Reconciliati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for Biden's stimulus plan*. CNN. Retrieved from Reconciliation: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for Biden's stimulus plan - CNNPolitics
- Carney, J., & Brufke, J. (2021). *This week: Democrats eye next step after coronavirus relief bill win*. The Hill.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this-week-democrats-eye-next-step-after-coronavirus-relief-bill-win/ar-BB1eBgph?ocid=msedgntp>
- Cochrane, E. (2021). *Divided Senate Passes Biden's Pandemic Aid Plan*.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nytimes.com/2021/03/06/us/politics/biden-stimulus-plan.html>
- Colby, C. (2021). *Democrats win Senate control amid Capitol Hill breach, paving the way for \$2,000 stimulus check*. Cnet. Retrieved from <https://www.cnet.com/personal-finance/democrats-win-senate-control-amid-capitol-hill-breach-paving-the-way-for-2000-stimulus-check/>
- Goldiner, D. (2020). *Georgia Democrats back \$2K COVID stimulus checks as do-or-die Senate run offs loom*. New York Daily News. Retrieved from Democrats in Georgia Senate off back \$2K COVID stimulus checks - New York Daily News (nydailynews.com)

-
- Higgins, T. (2021). *Romney child-payment proposal would spend more than Biden plan — but also aims to cut welfare programs*. CNBC.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money/markets/romney-child-payment-proposal-would-spend-more-than-biden-plan-but-also-aims-to-cut-welfare-programs/ar-BB1doExW?ocid=msedgntp>
- Horti, S. (2020). *Biden ally Larry Summers, a former treasury secretary, said \$2,000 stimulus checks would be a 'serious mistake' that could overheat the economy*. Business Insider. Retrieved from <https://www.businessinsider.com/larry-summers-said-2000-stimulus-checks-would-be-a-serious-mistake>
- Jarvis, J. (2020). *Second Stimulus Check Delay Weaponized by Democrats in Georgia Runoffs*. Newsweek. Retrieved from <https://www.newsweek.com/second-stimulus-checks-georgia-runoffs-1555889>
- Lemon, J. (2021). *Economists Warn of Risks of Too Little COVID Stimulus as GOP Senators Push Smaller Package*. Newsweek. Retrieved from <https://www.newsweek.com/economists-warn-risks-too-little-covid-stimulus-gop-senators-push-smaller-package-1565910>
- Lobosco, K., & Luhby, T. (2020). *Here's what's in the second stimulus package*. CNN. Retrieved from <https://www.cnn.com/2020/12/20/politics/second-covid-stimulus-package-details/index.html>
- Locke, T. (2021). *Kohl's CEO on proposed third stimulus check under Biden: 'Anything that puts money into the pockets of our consumers is a good thing'*. CNBC. Retrieved from <https://www.cnbc.com/2021/01/22/kohls-ceo-on-third-1400-dollar-stimulus-check-under-president-joe-biden.html>
- Long, H. (2021). *Cutting off stimulus checks to Americans earning over \$75,000 could be wise, new data suggests*. The Washington Post.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money/news/cutting-off-stimulus-checks-to-americans-earning-over-75-000-could-be-wise-new-data-suggests/ar-BB1d738Q?ocid=msedgntp>
- Luhby, T. (2021). *Stimulus update: Biden is no longer afraid to spend big on economic relief. Here's what's changed since 2009*. CNN. Retrieved from <https://www.cnn.com/2021/01/25/politics/biden-pandemic-relief-economic-stimulus/index.html>
- Luhby, T., & Lobosco, K. (2021). *Comparing the Biden and GOP stimulus proposals*. CNN. Retrieved from <https://www.cnn.com/2021/02/01/politics/stimulus-plans-biden-gop-comparison/index.html>
- Mastrangelo, D. (2020). *Progressive Democrats signal support for Trump's higher direct payment request*. The Hill.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homenews/531403-progressive-democrats-signal-support-for-trumps-direct-payment-request>
- Ollstein, A.M., Cassella, M., & Emmam C. (2021). *Biden, Democrats, plot 'aggressive' pandemic response — without the GOP*. Politico. Retrieved from <https://www.politico.com/news/2021/01/12/biden-coronavirus-stimulus-package-458445>
- Pengelly, M. (2021). *Joe Manchin's stimulus stand exposes dangerous fissures in Democratic ranks*. The Guardian. Retrieved from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1/jan/12/joe-manchin-stimulus-democrats>
- Rahman, K. (2021). *How Joe Biden's Stimulus Deal Compares With Donald Trump's First on 5 Key Issues*. CNN.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money/smallbusiness/how-joe-biden-s-stimulus-deal-compares-with-donald-trump-s-first-on-5-key-issues/ar-BB1ekEkU?ocid=msedgntp>
- Shepardson, D. (2021). *Yellen says U.S. must 'act big' on next coronavirus relief package*. Reuters. Retrieved from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biden-treasury/yellen-says-u-s-must-act-big-on-next-coronavirus-relief-package-idUSKBN29N1YJ>
- Slisco, A. (2021). *More Stimulus Checks Should Be Among Biden's Top Priorities, Nearly 80% of Americans Say*. Newsweek. Retrieved from <https://www.newsweek.com/more-stimulus-checks-should-among-bidens-top-priorities-nearly-80-americans-say-1562857>
- Tankersley, J., & Smialek, J. (2021). *Biden Presses Economic Aid Plan, Rejecting Inflation Fears*. Newsweek. Retrieved from <https://www.msn.com/en-us/news/politics/biden-presses-economic-aid-plan-rejecting-inflation-fears/ar-BB1ei9V?ocid=msedgntp>
- Williams, J. (2021). *House to vote on revised COVID-19 bill Tuesday*. The Hill. Retrieved from <https://thehill.com/homenews/house/541954-hoyer-says-house-will-vote-on-senate-amended-stimulus-package-on-tuesday>
- Zhao, C. (2021). *Progressives Push for \$2,000 Monthly Stimulus Checks and 65% of Americans Support It*. Newsweek. Retrieved from <https://www.newsweek.com/progressives-push-for-2000-monthly-stimulus-checks-and-65-of-americans-support-it-1562857>